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1. 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4. 21.

기획행정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입법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원종진 의원 등 5명(조복희, 배지훈, 박정환, 윤권근)
- 발의일자: 2021. 4. 8.
- 회부일자: 2021. 4. 9.
- 검토기간: 2021. 4. 12. ~ 4. 16.(5일간)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실시되는 조례의 제정과 폐기 청구는 물론, 조례입법 과정에 달서구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참정권 확대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3조)
- 구청장은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 등 개최,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구청장은 조례입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입법학교 등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조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1. 4. 8. ~ 2021. 4. 19.)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달서구 조례입법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 등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입법학교 등 교육사업 시행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조례의 제정과 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고,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는 주민의 조례입법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주민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다르므로 법적 혼란의 소지가 있어서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어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조례의 입법 과정에 주민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입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과 구, 구의회가 협력하는 행정을 도모하여 행정의 민주성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동의함.
- 다만,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 제2조제1호 주민의 정의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다르므로 법적 혼란의 소지가 있어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수정내용

조례안	수정(안)	사 유
<p>제2조(정의)</p> <p>1.“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p> <p>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리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p> <p>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p> <p>다.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p>	<p>제2조(정의)</p> <p>< 삭 제 ></p>	<p>주민의 정의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맞지 않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함</p>

【 관 계 법 령 】

□ 주민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 4. 1.>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

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 1.>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 1.>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1. 7. 14.>

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 4. 1.>

⑪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